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한중일 경제협력: 도전과 향후 전망

Zhang Huizhi\*, Li Chang\*\*

목 차	
I. 서론	의도에 미치는 영향
II.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해석	V. 경제안보 관점에서 한중일 경제협력
III. 한중일 경제안보 인식 판별분석	추진의 안정전략 및 돌파 경로
IV. 경제안보 인식이 한중일 경제협력	VI. 결어

| 논문요약 |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경제안보는 국가 전략구상의 핵심 고려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전개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내 핵심 경제주체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역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추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재조정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한합리성 이론에 기반하여 ‘경제안보 인식-정책 경로의 선택-협력 형태의 진화’라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한중일 3국의 경제안보 인식이 경제협력 관계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에 대해 일정한 공통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가별로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중일은 상이한 경제안보 확보 방식과 정책 경로를 형성했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저한 단계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즉 ‘효율 우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이 심화된 단계, ‘안보 우선’의 인식 아래 협력이 제한적으로 전개된 단계, 그리고 최근 인식 조정에 따라 협력이 재추진되는 단계이다. 향후 한중일 3국은 고위급 대화의 강화, ‘약 정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양자관계와 3자협력의 선순환적 연계를 통해 협력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3국은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안

\* 제1저자 : Zhang Huizhi. 지린대학교 동북아 학원 교수.  
 \*\* 교신저자 : Li Chang. 지린대학교 동북아 학원 박사생.

보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경제안보인식, 미중 전략경쟁, 경제경쟁, 한중일 경제협력, 경제 일체화

## I. 서론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1999년 한중일 협력기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경제·통상 협력의 외연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3국은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3국은 긴밀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세안+3(ASEAN+3)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경제·통상·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제도화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나아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글로벌 지정학 및 지경학적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경제협력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놓여 있다. 최근 국제적 세력구조가 이른바 ‘동승서강’과 ‘권력 이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국의 세계적 주도권 약화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졌고, 중국을 ‘가장 중대한 경쟁상대’로 규정한 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 아래 동북아를 대중 전략경쟁의 지정학적 최전선에 배치하여 미일 및 미한 양자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의 수호를 명분으로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체제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투자, 공급망, 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경제진영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력은 강한 외부적 전략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한중일 간 전통적인 ‘수직적 상호보완’의 협력 방식은 점차 ‘수평적 경쟁’의 양상으로 전환되

고 있으며, 3국 간 경제적 경쟁 의식 또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안보는 3국의 경제정책 수립에서 점차 핵심적인 고려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은 뚜렷한 국가적 주체성과 시대적 변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향과 경로 선택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 시대 배경 하에서 안보와 발전, 경쟁과 공생을 아우를 수 있는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전략적 과제이다. 이는 3국의 발전과 번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안정과 세계경제 성장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안보 인식-정책 경로 선택-협력 형태 진화’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안보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3국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해석

### 1. 선행연구 고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의제의 ‘안보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보적 제약을 어떻게 완화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경제안보의 개념과 국가별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이다. 해당 논의는 경제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경로를 중심으로 각국 전략의 기본 논리를 검토해 왔으며, 한중일 3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

반을 제공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과제는 한미동맹과 대중 경제의존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손열·이승주 2024). 1) 중국은 발전과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산업체계의 자립성 확보와 경제안보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董志勇 2023). 2) 일본은 ‘포스트아베(Post-Abe)’ 시기 이후 경제안보를 국가전략 차원의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공급망 안정, 핵심 인프라 보호, 핵심 기술 육성, 민감 기술 관리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왔다(關照宇 2025).<sup>3)</sup>

둘째, 한중일 경제협력의 전개 과정과 단계적 특징에 관한 논의이다. 선행 연구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 FTA, RCEP, 지역경제통합 등을 중심으로 3국 경제협력의 추진 동력과 제약 요인, 변화 과정을 검토해 왔다. 이는 경제안보 인식이 한중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현재 한중일은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실무급 협의로 이어지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한중일 FTA 구상과 ‘RCEP+’ 등의 틀 속에서 협력의 범위를 넓혀 왔다(巴殿君·左天全 2024). 4) 한편 미국 주도의 글로벌 산업공급망 재편은 기존 한중일 산업공급망 협력에 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 구조의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李冬新 2024; 王春麗·敖翔 2024).<sup>5)</sup>

셋째, 경제안보화가 지역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이다. 대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 이상 협력의 기반으로만 이해되기 어렵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국가는 이를 활용해 다른 국가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은 배타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Farrell&Newman 2019).<sup>6)</sup>

1) 손열·이승주 (2024).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 서울: EAI(동아시아연구원).

2) 董志勇(2023). “強化國家經濟安全保障.” 『新華月報』. 제23호, pp. 110-112.

3) 關照宇(2025). “日本國家經濟安全戰略的范式轉變與發展困境.” 『日本研究』. 제2호, pp. 40-50.

4) 巴殿君·左天全(2024). “中日韓合作的發展、困境與前景.” 『國際問題研究』. 제1호, pp. 110-129+134.

5) 李冬新(2024). “美國去中國化產業鏈重塑戰略對中日韓合作的影響.” 『東北亞論壇』. 제33권 제6호, pp. 78-92+126.; 王春麗·敖翔(2024). “美國與東亞國家貿易摩擦對東亞區域發展的影響研究——以中日韓三國為例.” 『亞太經濟』. 제6호, pp. 95-105.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경제안보는 양국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동맹체제와 배타적 소다자 협력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RCEP, 글로벌 사우스,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대외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안보화가 개별 국가의 대외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협력 과정에서 진영화, 규범 갈등, 제도 경쟁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지영·한동균 2023).<sup>7)</sup>

넷째, 한중일 협력의 향후 방향과 현실적 제약에 관한 논의이다. 선행연구는 한중일 협력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안보적 제약 속에서도 경제·통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협력은 다양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산업·공급망 안정, 지역경제통합, 인적·문화 교류, 다자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여전히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국 협력을 회복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된다(楊延龍·叶如靜 2023).<sup>8)</sup> 또한 한중일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개발협력을 비교한 연구는 3국이 협력 이념, 제도적 장치, 정책 수단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개발협력을 경제외교와 국제적 영향력 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Zavarce Velasquez&Carlos David 2025).<sup>9)</sup>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경제안보를 한중일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제약 요인으로 주로 이해해 왔다. 반면 경제안보 인식이 3국 경제협력의 방향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경제안보 리스크 인식이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차별화된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아직 부

6)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PP.42 - 79.

7) 박지영·한동균(2023). "미중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경제 강압에 대한 고찰." 『한국아시아학회』 제26권 제4호, PP.1 - 22.

8) 楊延龍·叶如靜(2023). "韓中日合作的挑戰、機遇和未來." <https://www.icc.org.cn/publications/policies/2049.html>. (2026년 4월 3일 검색)

9) Zavarce Velasquez and Carlos David (2025). "East Asian Cooperation Approaches Toward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Cases of Japan, China, and South Korea." *AUSTRAL: Brazilian Journal of Strategy & International Relations*. Vol.14, No. 28.

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안보 인식을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의 변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이론적 설명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론이다. 이론적 출발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일반적으로 국가 행위자가 충분한 정보, 안정적인 선호,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효용 극대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정치경제에서 국가 정책결정자는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다. 이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1950년대에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실의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을 갖춘 행위자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정책결정 또한 절대적 의미의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sup>10)</sup>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경제안보 인식이 국가의 정책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한중일 경제협력 형태의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안보 인식-정책 경로 선택-경제협력 양상의 변화”라는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경제안보 의제에서 정책결정자는 모든 경제적 위험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안보 인식은 객관적 위험에 대한 완전한 파악의 결과라기보다, 특정한 국제환경 속에서 정책결정자가 경제적 의존, 기술경쟁, 시장위험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고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으나, 산업구조, 국제전략적 위상, 동맹관계, 국내외 정치적 압력, 발전 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안보 정책경로 선택의 차이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경제적 상호의

10) (美)西蒙·赫伯特著,黃濤譯(2001). 『有限理性模型』. 北京: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

존을 발전의 기회로 인식할 경우 정책 방향은 개방적 협력, 제도적 조율, 지역경제 통합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반면 경제적 상호의존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안보 심사, 위협 평가,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같은 정책수단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외부 의존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기술 봉쇄, 수출통제, 자립성 강화와 같은 보호적 정책수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경제안보 인식은 협력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 국가의 정책수단 선택과 협력 방식의 설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력의 형태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경제안보 인식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논리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 이 이론은 한편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협 판단이 객관적 위협 그 자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안보 인식이 전략문화, 경제적 기반, 외부 압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일 3국이 유사한 외부환경에 직면하면서도 상이한 정책경로를 선택하고, 이러한 정책경로의 차이가 경제협력 형태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중일 3국의 경제안보 확보 노력이 반드시 3국 경제협력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무역·투자 중심 협력이 위협 관리, 공급망 회복력, 핵심 산업 조율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재구성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 Ⅲ. 한중일 경제안보 인식 판별분석

세계화의 퇴조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는 전통안보 담론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던 의제에서 점차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인 한중일 3국은 모두 복합적인 지정학적·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3국의 경제안보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각국이 지닌 상이한 정체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안보함의, 위협 인식의 대상, 정책 대응의 논리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 1. 한중일 경제안보 인식의 공감대

현 국제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일 3국은 모두 경제활동의 안정적 운영이 경제발전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적 도전 속에서 ‘자율성’과 ‘발전’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는 각국의 경제안보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위상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이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먼저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제시되면서 경제안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명확히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기초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sup>11)</sup> 여러 정책문서와 전략계획에서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예컨대 2015년 개정된 「국가안전법」은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범주에 공식 포함시키고, 경제안보 확보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였다.<sup>12)</sup> 또한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은 국가 경제안보의 강화를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다.<sup>13)</sup> 일본 역시 경제안보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요한 정책 의제로 인식해 왔다. 1980년대 이른바 미일 통상마찰을 계기로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도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2년 일본은 「경제안전

11) 中國日報(2018). “【央視快評】開創新時代國家安全治理新局面.” [https://china.china-daily.com.cn/2018-04/15/content\\_36033279.htm](https://china.china-daily.com.cn/2018-04/15/content_36033279.htm). (2026년 3월 1일 검색)

12)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5). “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主席令第二十九號).” [https://www.gov.cn/c16762/2015-07/01/content\\_2893902.htm](https://www.gov.cn/c16762/2015-07/01/content_2893902.htm). (2026년 4월 1일 검색)

13)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2026년 4월 10일 검색)

보장추진법」과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제도적 추진을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sup>14)</sup>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체제로서 외부 시장의 어떠한 변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잡적이고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 시대’라는 개념이 제시되었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2023년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은 ‘경제안보 이익의 보장’을 국가안보의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경제안보가 국가전략의 핵심 축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sup>15)</sup>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의 핵심적 지향에 있어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율성’과 ‘경제발전’의 실현은 3국이 경제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많은 중요회의와 국가 전략 문건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산업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경제안보 확보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및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보완하며, 핵심 분야에서의 자립적 혁신과 국산화·수입대체를 추진하여 산업체계의 자율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높이고, 개방 조건하에서도 국가가 자주적 의사결정을 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발전과 안보 총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제발전과 경제안보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촉진적인 통일체로 인식하여 양자를 모두 국가 현대화 건설의 내재적 요구이자 전략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경제안보의 목표를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해 왔다. 2020년 자유민주당이 발표한 「경제안보전략」 수립에 관한 제언」은 경제안전보장의 목표를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독립·생존·번영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두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핵심

14) 外務省 (2022). “日本の安全保障政策.” [https://www.mofa.go.jp/np/np/page1we\\_000081.html](https://www.mofa.go.jp/np/np/page1we_000081.html). (2026년 4월 12일 검색)

15) 외교부 (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https://www.mofa.go.kr/www/wpg/e/m\\_25945/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5945/contents.do). (2026년 3월 8일 검색)

물자의 공급 및 산업·공급망의 자율성을 높여 일본 국민의 생계와 경제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의 대체 불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번영과 발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sup>16)</sup> 한국은 아직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나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전략 문서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 관련 정책문서와 법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점차 외부 의존 완화,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자율성의 안정적 확보를 경제안보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목적 역시 대외 충격에 대한 자국 경제체계의 대응 능력과 자율성을 향상하고, 경제발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서도 공통점을 보이는데, 다원화 경제관계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경로로 만드는 것이다. 강대국 경쟁, 지정학적 갈등,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중첩되면서 3국은 단일 시장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외부 충격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공급망과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sup>17)</sup>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위험 분산을 위한 다원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무역 파트너의 확장과 투자 거점의 재조정을 통해 수출시장과 수입원을 분산시키고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요강」에서 수입원의 다원화, 국제시장 배치의 최적화, 전통시장의 공고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제시하였고, 여러 회의에서도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전성 향상'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sup>18)</sup> 또한 '일대일로' 구상과 RCEP 등

16) 自民党 (2020). "Recommendations Toward Developing Japan's 'Economic Security Strategy'." [https://storage2.jimin.jp/pdf/news/policy/201021\\_5.pdf](https://storage2.jimin.jp/pdf/news/policy/201021_5.pdf). (2026년 4월 10일 검색)

17) 程時雄·侯棋(2025). "中日韓出口比較優勢演變、經濟安全競爭與區域合作博弈." 『東北亞論壇』. 제34권. 제5호, pp. 58-74+127-128.

18)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산업 및 공급망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국제적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개방적 협력 속에서 경제체계의 대외 충격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은 2020년 「통상백서」에서 공급 경로의 다양화 국제 공급망 구축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축소를 강조하며 경제안보 강화를 도모하였다.<sup>19)</sup> 이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핵심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반도체·축전지·중요 광물 등 12개 품목을 ‘특정중요 물자’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생산능력 확충과 상류 자원의 다원화를 통해 대외 의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기업의 시장 및 투자 거점을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등 신흥시장과 협력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체계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며 다자·양자·소다자 협력을 통한 통상관계의 다원화와 공급망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3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출시장 다원화, 국내외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천 차원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자립화와 다원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정·조세 지원을 통해 공급망 조달처를 다원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IPEF와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대외 경제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 수준을 높이고 있다.

## 2. 한중일 경제안보 인식의 차이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국의 국내 여건, 경제구조, 전략적 위상, 동맹체제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는 구조적 편차와 방향상의 엇갈림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조건과 외부 동맹 압력의 제약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안보를 둘러싼 인식에서 중국

92681.htm. (2026년 4월 10일 검색)

19) 經濟産業省(2019). “通商白書2020.” <https://www.meti.go.jp/report/tshuhaku2020/index.html>. (2026년 3월 12일 검색)

과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 합의의 이해와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정세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안보 인식은 점차 체계화되어 왔으며, 일관되게 발전과 안보를 함께 추진한다는 기초를 유지해 왔다. 특히 ‘15차 5개년 계획’ 관련 문건은 발전과 안보 총괄을 향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전중에서 안전을 공고히 하고 안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방어적 안보 인식을 발전형 안보로 확장하여 안보를 발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자 동력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20)</sup> 이에 비해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다루어 왔으며, 경제안보의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목표의 실현과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전략적 지향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경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sup>21)</sup> 2020년 당시 NSS를 이끌었던 기타무라 시게루는 인터뷰에서 경제안보의 실질을 ‘국가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외교·안보와 결합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22)</sup> 이는 일본이 경제안보를 통해 지역 및 세계 질서 속에서 자국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은 자원 기반의 제약, 민감한 지정학적 환경, 높은 대외의존도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 경제안보를 통해 기존의 기술·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확대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을 높이고 지정학적·지경학적 위협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경제 문제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안보의 강화를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과 회복력을 향상하고 핵심 분야에서 대외적 강압과 제약에 따른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20) 中共中央党校(2026). “在發展中固安全在安全中謀發展.” [https://www.ccps.gov.cn/xxwx/202601/t20260115\\_169857.shtml](https://www.ccps.gov.cn/xxwx/202601/t20260115_169857.shtml). (2026년 4월 10일 검색)

21) 孟曉旭(2023). “大國競爭與日本經濟安全戰略構建.” 『日本學刊』. 제1호, pp. 33-64.

22) TJJ(2021). “What Is ‘Economic Security’?” <https://www.japanjournal.jp/economy/pt202111072144.html>. (2026년 2월 14일 검색)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스티븐 M. 월트(Stephen M. Walt)와 랜들 슈웰러(Randall Schweller)는 위협 인식은 국력,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기억,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4)</sup> 이처럼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위협 인식은 국가가 처한 국제환경과 밀접하게 연동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 인식과도 긴밀히 맞물려 형성된다. 중국의 경우,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무역·금융·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 이는 중국의 발전 이익과 경제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sup>25)</sup>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이 인식하는 경제안보 위협 요인은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구조와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는 동시에, 외부의 전략적 압력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국제시장 수요와 해외 자원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국가이자 자원빈곤국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경제안보의 취약성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해 왔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양국의 경제안보 인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안보가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이 초래하는 파급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주요 분야에서 대미 공조를 요구받으면서 안보 의존 아래 경제적 자율성이 제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산업경쟁력의 향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압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부의 기술 봉쇄와 수출통제 등 일방적 제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출통제법」과 「반외국제재법」의 제정, 핵심 광물 관리 강화, 산업망·공급망의 자립성과 통제 가능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23) 외교부 (2023).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https://www.mofa.go.kr>. (2026년 2월 14일 검색)

24) (美)스티븐·워싱턴著,周丕啓譯(2018). 『聯盟의起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美)스티븐·워싱턴著,周丕啓譯(2018). 『聯盟의起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5) 張豪·郭克莎(2025). “大國博奔與中國經濟安全: 理論架構、策略選擇與效力提升路徑.” 『南京社會科學』. 제2호, pp. 30-39.

한국과 일본에서 공급망 리스크와 정책적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양국의 자국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자극함으로써 인식적 차원에서 중대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외정책논리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국 모두 대외협력의 강화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방식과 정책의 기저 논리는 상이하다. 외부의 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고수준 개방을 통해 국가 경제안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안전은 개방의 중요한 전제이고, 개방은 안전의 중요한 보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sup>26)</sup> 그 핵심맥락은 국제적으로 가장 완전한 산업체제와 초대형 시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경제·무역 협력과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의존성과 국제규범 정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정·개방·포용·상생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를 구축·유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대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경제안보를 ‘공동의 가치’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 양국은 이념을 대외정책의 기본 논리로 삼아 대외 경제안보 협력에 진영화·가치지향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 2025」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동맹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강조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및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를 확대함

26)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24). “加快建設更高水平開放型經濟新體制.” [https://www.ndrc.gov.cn/fzggw/wld/zsj/zyhd/202412/t20241203\\_1394787.html](https://www.ndrc.gov.cn/fzggw/wld/zsj/zyhd/202412/t20241203_1394787.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27) 外務省(2025). “外交ブルーブック2025.”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index.html>. (2026년 1월 14일 검색)

으로써 전략자원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가치지향적 대외정책은 경제 이슈에 강한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고, 협력을 배타적 정체성에 기초한 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개방적 협력의 공간을 크게 제약한다. 그 결과 역내 경제의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자국 경제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하여, 경제안보를 유지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 IV. 경제안보 인식이 한중일 경제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허버트 A. 사이먼(Herbert A. Simon)의 유한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정보와 계산능력을 갖춘 최적 행위자가 아니라 제한된 인지 자원 속에서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며 선택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자’이다.<sup>29)</sup> 다시 말해,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선택은 사전에 형성된 ‘인지적 틀’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공통성과 차별성은 3국 관계가 장기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1. ‘효율 우선’ 공감대하의 한중일 협력 심화

1999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은 아세안+3(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찬회동을 개최함으로써 한중일 협력의 출발을 공식화하였다.<sup>30)</sup> 21

28) 외교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https://www.mofa.go.kr/www/bord/m\\_4080/view.do?seq=373216](https://www.mofa.go.kr/www/bord/m_4080/view.do?seq=373216). (2026년 2월 14일 검색)

29) (美)西蒙(Simon, H.A.) 黃濤譯(2001). 『有限理性模型』. 北京: 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

30) 外交部(2012). “《中日韓合作 (1999-2012) 》白皮書 (全文).” [https://www.fmprc.gov.cn/web/wjt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zh\\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https://www.fmprc.gov.cn/web/wjt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zh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 (2026년 3월 16일 검색)

세기에 들어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지역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효율 우선’의 협력 공감대를 점차 형성해 갔다.<sup>31)</sup> 이 시기 3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발전주의 논리에 주로 기초하고 있었으며, 경제발전을 국가 경제안보의 우선 과제로 간주한 채 무역·투자·금융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인식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협력 체제는 빠르게 제도화되었고, 경제·통상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제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경제협력은 비공식적 접촉 단계를 넘어 점차 제도화된 협력체계로 발전해 왔다. 초기 3국 협력은 아세안+3(ASEAN+3) 틀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정상 간 비공식 회동을 중심으로 경제·통상, 투자, 인문교류,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점차 확장해 갔다. 2008년 12월 3국이 처음으로 아세안+3 틀 밖에서 독자적인 한중일 정상 회의를 개최한 것은 한중일 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3자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었다. 또한 3국은 「중·한·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협력의 성격을 단순한 협조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 이어 2011년 9월 서울에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이 공식 출범하면서 이는 3국 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sup>32)</sup> 2002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구상이 처음 제기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후 2012년 5월 3국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한중일 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비록 오랜 기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는 고수준 경제·통상 규범과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3국의 공동된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33)</sup> 한편 3자 협력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31) KDI (2003). “A Vi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https://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7126](https://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7126). (2026년 3월 12일 검색)

32) 巴殿君·左天全(2024). “中日韓合作的發展、困境與前景.” 『國際問題研究』, 제1호, pp. 110-129+134.

33) 外交部(2012). “《中日韓合作(1999-2012)》白皮書(全文).” [https://www.fmprc.gov.cn/web/wjw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https://www.fmprc.gov.cn/web/wjw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 (2026년 3월 16일 검색); 外務省(2012). “日本、中國、韓國間のFTA交渉開始の発表.” <https://www.mofa.go.jp/announce/anno>

양자 협력 메커니즘도 함께 발전하였다. 예컨대 2003년 한일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고, 2008년 중일 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한중 관계 역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메커니즘 구축도 제기되었다.<sup>34)</sup> 이처럼 한중일 3국은 제도 구축, 정책 협의, 인문교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의 기반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진전은 3국 경제협력의 지속적 심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경제·통상 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상호 교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편 3국은 경제·통상, 투자, 과학기술, 금융, 환경 등 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협력의 중점을 두고, 비교적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이견이 협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효율 우선’의 협력 원칙을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2003년 「중·한·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은<sup>35)</sup> 3국이 ‘순차적으로 또한 쉬운 것부터’라는 원칙 아래 경제·통상, 투자, 재정·금융, 교통, 과학기술,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12년 발표된 《中日韓合作(1999-2012)》白皮書(이하 「중일한 협력(1999-2012) 백서」)는 한중일 협력은 ‘선 실무 협력 후 심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어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sup>36)</sup> 이 시기 3국 간 상품교역액은 1999년 1,301억 3,300만 달러에서 2016년 5,988억 7,600만 달러로 (그림 1과 같이) 증가하였고, 3국은 서로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국은 200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한편

unce/2012/11/1120\_02.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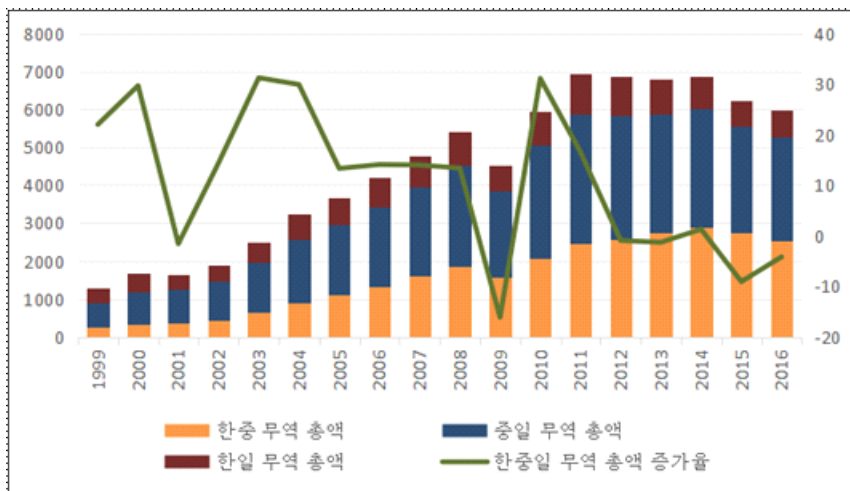
34) 外務省(2008). “日本·大韓民國EPA(概要).”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fta/rok/overview.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外交部(2008). “中日關於全面推進戰略互惠關係的聯合聲明.” <https://www.mfa.gov.cn>. (2026년 4월 14일 검색); 外交部(2008). “中韓聯合聲明.” <https://www.mfa.gov.cn>. (2026년 4월 14일 검색)

3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03). “中日韓推進三方合作聯合宣言.”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477.htm](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477.htm). (2026년 4월 14일 검색)

36) 外交部(2012). “《中日韓合作(1999-2012)》白皮書(全文).” [https://www.fmprc.gov.cn/web/wjw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https://www.fmprc.gov.cn/web/wjw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 (2026년 3월 16일 검색)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산업화 단계와 요소부존 구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내 역내 분업구조를 형성하였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조립 거점으로 부상하였고, 일본은 기술 선도국으로서 첨단 소재, 정밀 제조, 핵심 부품 등 분야에 집중하면서 자본·기술집약적 우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중고위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역내 산업 연계와 수출주도형 생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로써 3국은 역내 경제체제 속에서 긴밀한 분업·협력 구조를 형성하였다.<sup>37)</sup>

<그림 1> 1999~2016년 한중일 3국 간 무역총액 및 증가율 추이



· 주1: 저자는 공식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sup>38)</sup>

주2: 계량 단위는 억 달러 및 백분율(%)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협력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적 상호신뢰가 취약한 탓에 협력의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적이었고, 그 추진력 또한 공동이익에 크게 의

37) 劉洪鐘(2024). 『超越區域生產網絡：東亞分工體系重構與中國角色』.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38)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효율 우선’의 협력 공감대는 역사 인식의 차이와 영토 분쟁 등 구조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인식의 전환 속에서 그 취약성이 점차 표면화되었다.

## 2. ‘안보 우선’ 사고 하의 한중일 유한 협력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경제안보 인식은 중국과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점차 ‘취약성의 원천’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작동 논리도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효율 우선’에서 ‘안보 우선’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전환은 주로 외부 충격과 각국의 경제적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대외 경제발전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의 고도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수출지향적과 자원희소적인 경제구조는 외부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제한된 합리성의 조건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장기적 협력 이익과 단기적 안보 비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어적 정책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sup>39)</sup> 그 결과 3국 간 경제·통상 관계는 기존의 효율성과 상호보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안보’의 프레임 속에서 재해석되었고, 경제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도 경쟁과 대립의 양상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 우선’ 인식은 한국과 일본이 대미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시장 및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과정보다 제약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압박과 자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미 협력 강화를 경제안보 확보의 핵심 경로로 인식하게 되었다. 양국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통해 보다 큰 안보 보장과 경제적 기회를

39)金香丹(2025).“‘特朗普沖擊’下的日韓‘泛安全化’供應鏈政策困境與中日韓合作.”『東北亞論壇』. 제34권. 제6호, pp. 110-124+126.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핵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대중 경쟁우위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한국과 일본은 점차 미국 주도의 '디리싱킹(de-risking)' 정책에 접근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Chip4)' 등 미국 주도의 지정학·지경학적 구상에 적극 편입되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규범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와 공동 대응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전략 구도에 자신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기술과 시장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으로 발생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 공백을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표 1과 같이, 2024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는 각각 전체 해외투자의 33.84%와 37.45%를 차지하여 2017년에 비해 각각 0.16%와 9.87% 증가하였으며, 그 투자도 신에너지차, 배터리, 집적회로 등 미국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전략 분야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7%와 6.02% 감소하였다. 이는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이 핵심 분야에서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2017~2024년 한일 대외직접투자 규모

연도	한국의 대외직접투자액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		
	미국	중국	총액	미국	중국	총액
2017	15336	3227	45528	47918	12417	173768
2018	11237	4805	51847	17399	11217	160267
2019	15765	5877	65742	51410	12021	258276
2020	15215	5135	58207	66907	11074	150103
2021	27930	6761	77044	82875	12464	209620
2022	30136	8544	83482	65883	5428	175097
2023	28833	1900	66035	66838	3448	197032
2024	22383	1932	66134	77624	2335	207295

· 주1: 저자는 공식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sup>40)</sup>

주2: 표시 금액은 유출액으로, 계량 단위는 백만 달러를 사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위협 인식도 한층 고조되었고, 이는 양국의 경제안보 수요를 확대시켜 3국 협력의 기반과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한중일 협력 방식은 전통적인 '수직적 상호보완'에서 점차 '수평적 경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신에너지차, 반도체, 동력 배터리,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부상하면서 기존의 하류 가공·조립 중심지에서 중고부가가치 제조와 기술혁신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왔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주력 산업이 확보해 온 시장 공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서 양국의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켰다.<sup>41)</sup> 한국무역협회가 2025년에 발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중국은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4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종합 수출경쟁력에서 이미 한국과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sup>42)</sup> 이처럼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안보 우려를 크게 증폭시켰고, 양국은 점차 '상호 의존'을 '취약성의 원천'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대외의존 축소'를 명분으로 반도체, 첨단제조, 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보호·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보다 '안전한' 산업체계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심으로 재편하고, 동맹체계와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체계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sup>43)</sup> 이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정책 실천 과정에서 경제효율보다 경제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점차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3국 협력은 갈수록 안보 이슈의 제약을 더 크게 받게 되었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진전 공간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 項昊宇(2024). "中日韓自貿區建設的難點與前景." 『世界知識』. 제13호, pp. 28-30.

42) 한국무역협회(2025).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https://www.kit.or.kr/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915>. (2026년 3월 13일 검색)

43) 關照宇·黃大慧(2024). "日本國家經濟安全戰略體系的構建與實施." 『和平與發展』. 제2호, pp. 114-139. ;張慧智·邢夢如(2024). "韓國經濟安全戰略構建：目標、重點內容與影響." 『亞太經濟』. 제4호, pp. 87-97.

주목할 점은, 이 시기 한중일 경제협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중일 교역 규모는 여전히 7,0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한국 또한 다시 중국의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3국 간 협력이 여전히 상당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sup>44)</sup>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3국 협력 의향의 약화는 전면적 ‘디커플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인식의 차이에 따라 한중일 협력이 기존의 ‘효율 우선’에 기초한 협력 심화 단계에서 ‘안보 우선’ 기초하의 제한적 협력 단계로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 3. 경제안보 인식 조정하의 한중일 협력 재출발

트럼프는 1기 집권기부터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대외정책 기초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이른바 ‘공정하고 호혜적인’ 양자 및 다자 무역관계를 명분으로 관세 조치와 통상 압박을 병행해 왔다.<sup>45)</sup>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 기초는 안보·통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감내해야 할 전략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안보, 첨단기술,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에 더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를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 양국이 대미 공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의 공간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up>46)</sup>동시에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제재와 중국의 대응 조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여건과 시장 점유율에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미국 시장의 수익성 축소’와 ‘중국 시장 점유의 위축’이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맹 관계를 거래의 논리에 따라 운용할수록 글로벌 경제질서와 다자무역체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양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44)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5) 趙海欣·王俊生(2025). “特朗普第二次執政以來美日韓三邊合作走勢及其對地區局勢的影響.” 『當代韓國』.제4호, pp. 39-53.

46) 劉阿明(2025). “特朗普2.0印太戰略的新動向.” 『當代世界』.제7호, pp. 58-65.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미 의존에 치우친 선택이 경제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미 의존을 더욱 심화시켜 자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중간재 시장에서 확보해 온 기회를 약화시켜, 양국에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전략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기존 경제안보 정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을 일방적인 위협 요인으로만 규정해 온 인식 역시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한미·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재명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2025년 9월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구축, 그리고 한중관계의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주요 외교 과제로 제시하였다.<sup>47)</sup> 같은 해 12월 말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sup>48)</sup>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한층 공고화하는 계기로 평가되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심화된 대중 협력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sup>49)</sup>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일 간 갈등과 관련하여 한국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와의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3국

47) 외교부 (2025).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419](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419). (2026년 3월 16일 검색)

48) 외교부 (2026). “한중 외교장관 통화(12.31)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813](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813). (2026년 1월 1일 검색)

49) Reuters (2026). “South Korea’s Lee seeks to develop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s-lee-seeks-develop-strategic-cooperative-partnership-with-china-2026-01-05/>. (2026년 1월 5일 검색)

이 공통점을 모색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한중일 협력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sup>50)</sup>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대중 경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5년 제6차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는 중일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분야의 실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sup>51)</sup> 대중 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는 제219회 국회 소신포명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지칭하면서,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sup>52)</sup> 2025년 10월 30일 다카이치 사나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관계의 기반 위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하였으며, 상호 방문을 통한 ‘셔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sup>53)</sup>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는 공급망과 첨단 산업 분야의 연계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에너지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해 왔다.<sup>54)</sup> 또한 일본은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대국인 그룹 A(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대(對)한국 협력과 투자를

50) 韓聯社(2025). “李在明：韓應在中日矛盾中發揮居中斡旋調解作用.” <https://m-cn.yna.co.kr/view/ACK20251203002000881?section=politics/index>. (2026년 1월 3일 검색); 韓聯社(2026). “李在明向日方強調韓中日合作重要性.” <https://cn.yna.co.kr/view/ACK20260113003600881>. (2026년 3월 13일 검색)

51) 外務省(2025). “第6回日中ハイレベル經濟對話の開催(概要).”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1933.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1933.html). (2026년 1월 22일 검색)

52) 首相官邸(2025). “第219回國會における高市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024shoshinhyomei.html>. (2025년 10월 24일 검색)

53) 外務省(2025). “日韓首腦會談.”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1\\_02535.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1_02535.html). (2025년 12월 30일 검색)

54) Korea JoongAng Daily (2025). “Trade minister calls for expanded ties with Japan in supply chains, advanced industries.”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12-11/business/economy/Trade-minister-calls-for-expanded-ties-with-Japan-in-supply-chains-advanced-industries/2475327>. (2025년 12월 11일 검색)

촉진·유도하였다.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인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경쟁 속에서도 3국 협력은 점차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협의체 차원의 재가동이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약 4년 반 만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고 협력체제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어 2025년 3월 도쿄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차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약 5년 만에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열렸으며, 3국은 경제·통상 협력 강화와 한중일 FTA 협상 진전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는 한중일 협력이 경쟁 국면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경제·통상 차원의 회복 조치이다. 2025년 한중일 교역 규모는 약 7,200억 달러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역내 교역 규모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25년 한일의 대중 직접투자 위축세도 다소 완화되었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57% 증가하였고, 전체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0.7% 상승하였다. 일본의 대중 투자 또한 감소 국면 속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5년 1~9월 기준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5.5% 급증하여, 중일 양자 정치관계와는 상이한 흐름을 나타냈다.<sup>55)</sup> 셋째, 인문교류 차원의 확장이다. 2024년 공동선언에서는 2025~2026년을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였다. 이어 2025년 외교장관회의에서는 4월 도쿄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2025-2026문화교류의 해’ 개막식과 연중 진행될 관련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3국 협력이 단지 정부 차원의 외교 복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인문 및 청년교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회복이 곧 경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일 양국이 동맹의 제약 속에서도 역내 협력에 대한 실용적 필요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분명한 이해관계에 기반한 헤징적 성격을 띤다. 동북아 지역의 복잡하게 얽힌 국가관계와 지정학적 갈등 역시

55) 자료: 중국 해관총서, 중국 상무부, 한국 관세청,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향후 3국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국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공감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V. 경제안보 관점하에 한중일 경제협력 추진의 안정 책략 및 돌파 경로

경제안보가 각국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중일 협력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협력에 대한 3국의 의지와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향후 실질협력의 기반 또한 여전히 견고하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중일 3국의 총경제규모는 25조 5,4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의 21.80%를 차지하였으며,<sup>56)</su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이 세계경제의 중심 축이자 역내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임을 시사한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가운데, 한중일 간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는 3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의 안정 유지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3국은 안보 협력, 규범의 조화,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보완, 호혜와 상생을 아우르는 역내 경제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경제협력을 토대로 안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 경제안보 시각 하에 한중일 경제협력 추진의 안정책략

첫째, RCEP을 기반으로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

5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정리.

진할 필요가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인구와 경제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발효 이후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RCEP은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경제권을 공통된 시장 규범 아래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세 인하, 원산지 규정의 정비, 투자 자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에 수반되는 제도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3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3국은 RCEP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3국 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RCEP 체제에서 상호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한층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입할당 제한을 축소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품 이동의 원활성을 높이고 역내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RCEP의 원산지 누적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역내 생산 및 분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간재 무역과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핵심 부품·원자재·기술의 역내 확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역내 생산·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3국은 RCEP을 계기로 투자 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투자 확대와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내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다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핵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의 연성(탄성)과 안정을 향상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이자 세계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동아시아 제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떠받치는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지역화·진영화·분절

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경제·통상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은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 체계가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지털 기술, 신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 기술혁신 역량의 제고, 제도 및 표준의 조율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공급망의 위험 대응 능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은 기존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설계, 첨단 공정, 핵심 소재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성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특정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제도적 조율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국은 디지털 인프라의 연결성을 높이고, 5G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제도적 조율과 표준화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기술장벽과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에너지 분야의 산업 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중일은 수소에너지, 동력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녹색·저탄소 기술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신에너지 시장에서의 협력의 외연도 함께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공간을 확대한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전통 제조업과 주력 산업은 역내 시장은 물론 미국·유럽 시장에서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협력 방식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양자 무역이나 역내 시장 통합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각국의 경제발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국 시장 협력은 한중일 3국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상호 간 경쟁을 완화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상호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제3국 시장 협력이란 3국의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sup>57)</sup>민감성과

취약성이 상존하는 한중일 관계를 놓고 볼때, 이러한 협력 방식은 쟁점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공동의 이익 기반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프라, 에너지, 통신망, 물류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국의 비교우위와 산업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제3국 시장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상호 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고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한중일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설비 등 인프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3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국 시장 협력은 한중일 협력을 역내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공동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접점을 넓히고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경제안보 시각 하에 한중일 경제협력 추진의 돌파 경로

첫째, 고위급 대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역사인식의 차이, 영토 분쟁, 외부 요인의 개입은 한중일 간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3국 간 경제협력은 종종 안보 딜레마의 제약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역내 경제협력의 비용을 높였을 뿐 아니라, 3국과 동북아 전체의 공동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전략적 상호신뢰의 회복은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와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위급 소통·조율 메커니즘은 안보 불신을 완화하고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그동안 다양한 대화 채널과 협의체를 구축해 왔으나, 기존 메커니즘은 여전히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 왔고, 그 운영 역시 양자관계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실제로 양자관계의 악화는 3국 협력

57)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9). “《第三方市場合作指南和案例》.” [https://www.ndrc.gov.cn/fzggw/jgsj/wzs/sjdt/201909/t20190904\\_1037022.html](https://www.ndrc.gov.cn/fzggw/jgsj/wzs/sjdt/201909/t20190904_1037022.html). (2026년 4월 12일 검색)

의 정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중일 정상회의도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이를 위해 한중일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정비·활성화하고, 안보 논리가 경제협력을 제약해 온 인식 틀과 협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정례화·제도화하여 고위급 회의의 개최 주기와 핵심 의제, 역할 분담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양자관계의 변동에 따른 3국 협력의 불안정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안보를 양자 및 삼자 협력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 무역·투자 규범 등 구체적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과 안보 고려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의 제도 조정과 정책 동향을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전략적 오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불필요한 경계심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약 정치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이론에서 이른바 ‘약 정치’(저위정치-low politics라고도 함)는 사회·경제·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의제와 민생 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 안보 의제에 비해 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협력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up>58)</sup>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안보 중심의 ‘고정치’의 분기는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반면 사회·경제·환경·보건 등 ‘약 정치분야’는 한중일 3국이 공동이익이 비교적 집중된 분야로서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상호의존을 높이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안보 중심의 인식을 완화함으로써 호혜적 협력이 제로섬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이는 경제 현안이 안보 논리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협력의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전통 분야 협력의 질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환경, 재난관리, 보건·안전 등의 분야에서 이미

58) Walsh, T. (202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igh politics and low politics?” <https://bromundlaw.com/international-relations/high-politics-vs-low-politics>. (2026년 4월 13일 검색)

20여 년에 걸친 협력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중일 황사 공동 모니터링 사업(DSS), 한중일 재난관리 장관급 회의, 감염병 예방·대응 협력 체계 등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 기반도 마련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초국가범죄 대응 등으로 협력 의제를 넓히고, 전통 분야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신흥분야 협력의 기회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다. 사회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보건의료, 돌봄·요양, 고령친화 산업 등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의제와 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양자관계와 3국 협력 간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한중일 협력은 그동안 이미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지만, 3국 관계의 취약성, 이익 중심 협력의 관성, 구조적 갈등요인이 맞물리면서 오랫동안 ‘정냉경열’과 ‘쉬이 깨어지고 난행’의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향후 한중일 협력의 핵심 돌파구는 양자관계와 3국 협력 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양자관계의 개선이 3국 협력의 진진으로 이어지고, 3국 협력의 성과가 다시 양자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3국 협력의 심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협력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양자관계의 개선이 3국 협력의 안정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국은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현안을 안정적으로 조율해야 하며, 특히 영토주권과 역사인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 양자관계의 변동이 3국 협력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자 간 고위급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관계 개선의 흐름이 3국 협력의 재개와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진전과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의 20개 공감대 도출은 장기간 정체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의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양자관계의 개선과 회

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3국은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경제·통상, 환경, 안보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자 간 갈등과 이견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가운데 특정 양자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이더라도, 3국 협력 플랫폼은 관계 악화를 완화하고 대화의 여지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자관계가 전면적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면서, 양자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조율의 공간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VI. 결어

한중일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을 돌이켜보면, 3국 협력은 우유곡절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전통적 의미의 지역통합 과정과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안보 의제가 경제정책의 주변부에서 핵심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3국 협력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 제약 속에서 제한적 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그리고 거대한 역내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 협력의 심화는 각국의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역내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 분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한중일 간 전략적 상호신뢰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각국은 상대국의 경제정책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나아가 일부 경제 현안은 안보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협력 메커니즘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수출통제와 기술규제 등 경제안보 사안에서 미국의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중일 협력의 공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한중일 3국은 제로섬적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 핵심이익과 발전 요구를 존중하고, 경제안보와 경제협력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3국의 발전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회복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 경제 질서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약 정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에 주력하며, 양자관계와 3국 협력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현재의 협력 교착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3국은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내수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협력 확대를 견인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안보와 발전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한중일 실질협력을 고도화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는 한중일 협력의 대외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박지영·한동균(2023). “미중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경제 강압에 대한 고찰.” 『한국 아시아학회』 .제26권. 제4호, PP.1 - 22.
- 손열·이승주(2024). 『미중경제전쟁과한국:경제안보의부상,위기와기회』 .서울:EAI (동아 시아연구원).
-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PP.42 - 79.
- Zavarce Velasquez and Carlos David (2025). “East Asian Cooperation Approaches Toward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Cases of Japan, China, and South Korea.” *AUSTRAL: Brazilian Journal of Strategy & International Relations*. Vol.14. No. 28.
- 巴殿君·左天全(2024).“中日韓合作的發展、困境与前景.” 『國際問題研究』 .제1호, pp. 110-129+134.
- 程時雄·侯棋(2025).“中日韓出口比較優勢演變、經濟安全競爭与區域合作博弈.” 『東北亞論壇』 . 제34권. 제5호, pp. 58-74+127-128.
- 董志勇(2023).“強化國家經濟安全保障.” 『新華月報』 . 제23호, pp. 110-112.
- 關照宇(2025).“日本國家經濟安全戰略的范式轉變与發展困境.” 『日本研究』 .제2호, pp. 40-50.
- 關照宇·黃大慧(2024).“日本國家經濟安全戰略体系的构建与實施.” 『和平与發展』 .제2호, pp. 114-139.
- 金香丹(2025).“‘特朗普冲击’下的日韓‘泛安全化’供應鏈政策困境与中日韓合作.” 『東北亞論壇』 .제34권. 제6호, pp. 110-124+126.
- 李冬新(2024).“美國‘去中國化’產業鏈重塑戰略對中日韓合作的影響.” 『東北亞論壇』 .제33권 제6호, pp. 78-92+126.
- 劉阿明(2025).“特朗普2.0‘印太戰略’的新動向.” 『当代世界』 .제7호, pp. 58-65.
- 劉洪鐘(2024). 『超越區域生產網絡：東亞分工体系重构与中國角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美)蘭德爾·施韋勒著,劉語默譯(2023). 『沒有應答的威脅 均勢的政治制約』 .上海：上海人民出版社.

- (美)스티븐·沃爾特著,周丕啓譯(2018). 『聯盟的起源』. 上海:上海人民出版社.
- (美)西蒙·赫伯特著,黃濤譯(2001). 『有限理性模型』. 北京: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
- 孟曉旭(2023). “大國競爭与日本經濟安全戰略构建.” 『日本學刊』. 제1호, pp. 33-64.
- 王春麗·敖翔(2024). “美國与東亞國家貿易摩擦對東亞區域發展的影響研究——以中日韓三國爲例.” 『亞太經濟』. 제6호, pp. 95-105.
- 項昊宇(2024). “中日韓自貿區建設的難点与前景.” 『世界知識』. 제13호, pp. 28-30.
- 張豪·郭克莎(2025). “大國博弈与中國經濟安全:理論架构、策略選擇与效力提升路徑.” 『南京社會科學』. 제2호, pp. 30-39.
- 張慧智·邢夢如(2024). “韓國經濟安全戰略构建:目標、重点內容与影響.” 『亞太經濟』. 제4호, pp. 87-97.
- 趙海欣·王俊生(2025). “特朗普第二次執政以來美日韓三邊合作走勢及其對地區局勢的影響.” 『當代韓國』. 제4호, pp. 39-53.

## 2. 기타

- 외교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 (2026년 2월 14일 검색)
- 외교부(2023).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https://www.mofa.go.kr>. (2026년 2월 14일 검색)
- 외교부(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https://www.mofa.go.kr/www/wpage/m\\_25945/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age/m_25945/contents.do). (2026년 3월 8일 검색)
- 외교부(2025).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419](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419). (2026년 3월 16일 검색)
- 외교부(2026). “한중 외교장관 통화(12.31)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813](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813). (2026년 1월 1일 검색)
- 한국무역협회(2025).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915>. (2026년 3월 13일 검색)
- KDI(2003). “A Vi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https://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7126](https://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7126). (2026년 3월 12일 검색)
- Korea JoongAng Daily(2025). “Trade minister calls for expanded ties with Japan in supply chains, advanced industries.”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12-11/business/economy/Trade-minister-calls-for-expanded>

- d-ties-with-Japan-in-supply-chains-advanced-industries/2475327. (2025년 12월 11일 검색)
- Reuters(2026). “South Korea’s Lee seeks to develop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s-lee-seeks-develop-strategic-cooperative-partnership-with-china-2026-01-05/>. (2026년 1월 5일 검색)
- TJJ(2021). “What Is ‘Economic Security’?” <https://www.japanjournal.jp/economy/pt202111072144.html>. (2026년 2월 14일 검색)
- Walsh, T.(202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igh politics and low politics?” <https://bromundlaw.com/international-relations/high-politics-vs-low-politics>.(2026년 4월 13일 검색)
- 韓聯社(2025). “李在明：韓應在中日矛盾中發揮居中斡旋調解作用.” <https://m-cn.yna.co.kr/view/ACK20251203002000881?section=politics/index>. (2026년 1월 3일 검색)
- 韓聯社(2026). “李在明向日方強調韓中日合作重要性.” <https://cn.yna.co.kr/view/ACK20260113003600881>. (2026년 3월 13일 검색)
- 外交部(2012). “《中日韓合作 (1999-2012) 》白皮書 (全文) .” [https://www.fmprc.gov.cn/web/wjt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https://www.fmprc.gov.cn/web/wjtb_673085/zjzg_673183/yzs_673193/dqzz_673197/zrhhz_673255/zywj_673267/201205/t20120509_7606222.shtml). (2026년 3월 16일 검색)
- 外交部(2008). “中日關於全面推進戰略互惠關係的聯合聲明.” <https://www.mfa.gov.cn>. (2026년 4월 14일 검색)
- 外交部(2008). “中韓聯合聲明.” <https://www.mfa.gov.cn>. (2026년 4월 14일 검색)
- 楊延龍·叶如靜(2023). “韓中日合作的挑戰、機遇和未來.” <https://www.icc.org.cn/publications/policies/2049.html>. (2026년 4월 3일 검색)
- 中國日報(2018). “【央視快評】開創新時代國家安全治理新局面.” [https://china.chinadaily.com.cn/2018-04/15/content\\_36033279.htm](https://china.chinadaily.com.cn/2018-04/15/content_36033279.htm). (2026년 3월 1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9). “《第三方市場合作指南和案例》.” [https://www.ndrc.gov.cn/fzggw/jgsj/wzs/sjjdt/201909/t20190904\\_1037022.html](https://www.ndrc.gov.cn/fzggw/jgsj/wzs/sjjdt/201909/t20190904_1037022.html). (2026년 4월 12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24). “加快建設更高水平開放型經濟新體制.” [https://www.ndrc.gov.cn/fzggw/wld/zsj/zyhd/202412/t20241203\\_1394787.html](https://www.ndrc.gov.cn/fzggw/wld/zsj/zyhd/202412/t20241203_1394787.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03).“中日韓推進三方合作聯合宣言.”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477.htm](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477.htm).(2026년 4월 14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5). “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 (主席令第二十九号).” [https://www.gov.cn/c16762/2015-07/01/content\\_2893902.htm](https://www.gov.cn/c16762/2015-07/01/content_2893902.htm). (2026년 4월 1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2026년 4월 10일 검색)
- 中共中央黨校(2026). “在發展中固安全在安全中謀發展.” [https://www.ccps.gov.cn/xwx/202601/t20260115\\_169857.shtml](https://www.ccps.gov.cn/xwx/202601/t20260115_169857.shtml). (2026년 4월 10일 검색)
- 經濟產業省(2019). “通商白書2020.” <https://www.meti.go.jp/report/tshaku2020/index.html>. (2026년 3월 12일 검색)
- 外務省(2008). “日本・大韓民國EPA(概要).”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fta/rok/overview.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 外務省(2012). “日本、中國、韓國間のFTA交渉開始の發表.” [https://www.mofa.go.jp/announce/announce/2012/11/1120\\_02.html](https://www.mofa.go.jp/announce/announce/2012/11/1120_02.html). (2026년 4월 14일 검색)
- 外務省 (2022). “日本の安全保障政策.” [https://www.mofa.go.jp/fp/nsp/page1we\\_000081.html](https://www.mofa.go.jp/fp/nsp/page1we_000081.html). (2026년 4월 12일 검색)
- 外務省 (2025). “外交ブルーブック2025.”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index.html>. (2026년 1월 14일 검색)
- 外務省(2025). “第6回日中ハイレベル經濟對話の開催 (概要).”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1933.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1933.html). (2026년 1월 22일 검색)
- 外務省(2025). “日韓首腦會談.”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01\\_02535.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01_02535.html). (2025년 12월 30일 검색)
- 自民党 (2020). “Recommendations Toward Developing Japan’s ‘Economic Security Strategy’.” [https://storage2.jimin.jp/pdf/news/policy/201021\\_5.pdf](https://storage2.jimin.jp/pdf/news/policy/201021_5.pdf). (2026년 4월 10일 검색)
- 首相官邸(2025). “第219回国會における高市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024shoshinhyomei.html>. (2025년 10월 24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6년 04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26년 05월 13일 |

| 게재 확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ABSTRACT |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Challenges and Prospects**

**Zhang Huizhi**

(Northeast Asian Research Center, Jilin University)

**Li Chang**

(Northeast Asian Studies College, Jilin University)

Against the backdrop of intensifying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mpetition alongside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economic security has emerged as a core consideration in national strategic planning, exerting a profound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major economic actors in the region, cooperation among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has inevitably been readjusted amid the trend of securitization of economic issues. Based on the bounded rationality theory, this paper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economic security perception, policy path selection and evolution of cooperation patterns, and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ynamic impacts of the three countries' perceptions of economic security on their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three countries share certain common understandings of economic security, their respective perceptions differ substantially. Accordingly, they have adopted distinct approaches and policy paths to safeguard economic security, which has led to marked phased changes in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o be specific, the cooperation has undergone three stages: an in-depth development phase underpinned by the consensus of "efficiency priority", a constrained development phase dominated by the

mindset of "security priority", and a newly revitalized phase driven by recent adjustments in relevant perceptions. Going forward, the three countries need to mitigate practical constraints on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high-level dialogues, expanding practical cooperation in low-politics areas, and fostering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bilateral ties and trilateral cooperation. Meanwhile, they should further consolidate trilateral collaboration to jointly uphold economic security and acceler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Key words: Economic security percepti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conomic competition, South Korea-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gration

